

JIPYONG

법무법인 지평

SHANGHAI OFFICE NEWSLETTER

* 본 뉴스레터는 상해총영사관의 법률지원
사업으로 제작되었습니다. *

MAY. 31, 2017

법무법인 지평 Shanghai Office

Room 2310, Shanghai Maxdo Center, No.8 Xing Yi Road, Shanghai, China

Tel. 86-21-5208-2808 Fax. 86-21-5208-2807 Email. shanghai@jipyong.com www.jipyong.com

법무법인 지평의 중국 Newsletter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 지평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적인 효력을 지닌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무법인 지평의 변호사 및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십시오.

CONTENTS

목차

법무법인 지평 Shanghai Office

Room 2310, Shanghai Maxdo Center, No.8 Xing Yi Road, Shanghai, China
Tel. 86-21-5208-2808 Fax. 86-21-5208-2807 Email. shanghai@jipyong.com
Copyright 2013 JIPYONG All Rights reserved.

법무법인 지평의 중국 Newsletter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 지평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적인 효력을 지닌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무법인 지평의 변호사 및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십시오.

1. 법률 뉴스

01. 증감회 주식회사 주주 주가조작행위 관련 "7조"규정발행
02. 노동인사 분쟁중재 처리 관련 규칙발표
03. 국가인터넷매체부, <인터넷 매체서비스 허가 관리세칙>발표
04. 식품 의약품 감독 관리 총국, 간소화 및 권한 이양으로 건강식품 비안 관리 추진
05. 관세청, 신규 입국수화물 및 특급화물 관리 감독규정 제정
06. 국무원, 수정된 <의료기기 감독관리 조례> 발표
07. 주택임대 및 매매 관련 신규제정예정 임대인 일방적으로 임대료 인상 불가
08. 최고양회 개인정보형사사건처리 관련 사법해석 발표
09. 국무원<"다증합일"개혁 가속화 추진에 대한 지도의견>발표
10. 심천증권거래소 독립이사 비안방법 수정, 직무자격과 독립성 등 요구 세분화

2. 최신법률법규 (별첨)

01. <상장회사주주, 동사, 감사, 고급관리인원의 주식보유량 감소에 관한 규정>
02. <노동인사 분쟁중재 처리 규칙>
03. <노동인사 분쟁중재 조직 규칙>
04. <인터넷 매체 서비스 허가 관리 시행세칙>
05. <건강식품 준비 업무지침서 (시범운영)>
06. <통과허가불가 수화물 물품 보존사항에 관한 공고>
07. <개인정보형사사건침해 처리에 관한 약간의 문제해석>
08. <"다증합일"개혁 가속화 추진에 대한 지도의견>

3. 지역중요뉴스

01. 자유무역구 및 보세구역 수출세금환급 관리 방식
02. 총칭 3대 혁신전략 실시 착안
03. 성도자유무역구 기업주소신고등기제도 실시

4. 사례분석

01. 사건소개
02. 쟁점
03. 심판결과

1. 법률 뉴스

01. 증감회 주식회사 주주 주가조작행위 관련 “7조”규정발행

출처 : 인민일보

[내용개요 : 최근 증감위는 <상장회사주주, 동사, 감사, 고급관리인원의 주식보유량 감소에 관한 규정>을 발행하여 상장회사의 관련 주주들이 주식보유량 감소행위를 진일보 규범화 하였으며, 상해 및 심천 증권거래소에서도 관련된 규칙을 공포하였다. 이번 <규정>은 다음과 같은 7 가지 방면의 내용을 포함한다. (1) 거액거래에 대한“과다감소”관리감독 개선 (2) 제재완화 후의 비(非) 공모발행주에 대한 규제 개선 (3) 적용범위 개선 (4) 주식보유량 감소 정보에 대한 공시제도 개선 (5) 협의양도규칙 개선 (6) 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보유량을 감소할 경우 공모자의 보유주식 합병계산에 관한 규정 (7)주주가 주식보유량을 감소할 경우 증권거래소의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证监会近日发布《上市公司股东、董监高减持股份的若干规定》，进一步规范上市公司有关股东减持股份行为。上海、深圳证券交易所也出台相关规则。

2016年1月，证监会曾发布规定，引导上市公司控股股东、持股5%以上股东及董事、监事、高级管理人员规范、理性、有序减持。然而，随着市场情况不断变化，现行减持制度暴露出一些问题：一些上市公司股东集中减持套现问题比较突出，市场反应强烈；上市公司股东和相关主体利用“高送转”推高股价配合减持以及利用大宗交易规则空白“过桥减持”等时有发生。这严重影响了中小股东对公司经营的预期，也对二级市场尤其对投资者信心造成负面影响。

对此，证监会新闻发言人邓舸表示，本次规定主要包括7方面。

一是完善大宗交易“过桥减持”监管安排。通过大宗交易减持股份的，出让方与受让方都应遵守证券交易所关于减持数量、持有时间等规定。二是完善非公开发行股份解禁后的减持规

范。持有非公开发行股份的股东，在锁定期届满后 12 个月内通过集中竞价交易减持，应符合证券交易所规定的比例限制。三是完善适用范围。对虽不是大股东，但如果其持有公司首次公开发行前发行的股份和上市公司非公开发行的股份，每 3 个月通过证券交易所集中竞价交易减持的该部分股份总数不得超过公司股份总数的 1%。四是完善减持信息披露制度。增加了董监高的减持预披露要求，从事前事中事后全面细化完善大股东和董监高的披露规则。五是完善协议转让规则。明确可交换债换股、股票权益互换等类似协议转让的行为应遵守该减持规定。适用范围内的股东协议转让股份的，出让方与受让方应在一定期限内继续遵守减持比例限制。六是规定持股 5%以上股东减持时与一致行动人的持股合并计算。七是明确股东减持应符合证券交易所规定，有违反的将依法查处；证券交易所对异常交易行为可依法采取限制交易等措施。

此次修改完善上市公司有关股东减持股份制度，对当前实践中存在、社会反响强烈的突出问题作了针对性的制度安排。既维护二级市场稳定，也关注市场的流动性；既关注资本退出渠道是否正常，也保障资本形成功能的发挥；既保障股东转让股份的应有权利，也保护中小投资者的合法权益；既考虑资本市场的顶层制度设计，也关注市场面临的现实问题，着眼堵塞现有制度漏洞，避免集中、大幅、无序减持扰乱二级市场秩序、冲击市场信心。

下一步，证监会将加大对违法违规减持行为的打击力度，特别是对于减持过程中涉嫌虚假信息披露、内幕交易、操纵市场等行为，严格执法，从严惩处，确保市场主体严格遵守制度规范，切实保护投资者特别是中小投资者的合法权益。

02. 노동인사 분쟁중재 처리 관련 규칙발표

출처 : 법제일보-법제사이트

[내용개요 : 최근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는 수정된 <노동인사 분쟁중재 처리 규칙> 및 <노동인사 분쟁중재 조직 규칙>을 발표하였다. 따라서 경업금지 기간 내 부여하는 경제보상금과 노동계약의 해제 및 중지에 의한 경제보상금과 같은 분쟁안건을 중국판결에 포함하였다. 수정된 <처리 규칙>은 간이처리절차를 명확히 하고, 최종판결의 범위를 세분화 하였으며, “집단 노동인사 분쟁 처리” 절차를 추가하였다. 수정된 <조직 규칙>은 중재판정단 구성을 보장 및 개선하였다. 두 규칙의 수정을 통하여 노동인사 분쟁 당사자들은 자신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함은 물론 그 방법이 한결 편리해 졌다.]

人力资源和社会保障部近日公布了修订后的《劳动人事争议仲裁办案规则》和《劳动人事争议仲裁组织规则》（以下分别简称《办案规则》《组织规则》）。据此，竞业限制期限内给予的经济补偿金、解除或者终止劳动合同的经济补偿等争议案件将被纳入终局裁决适用范围。

新增简易处理程序

为贯彻自 2008 年 5 月 1 日起施行的劳动争议调解仲裁法，人社部分别于 2009 年 1 月 1 日和 2010 年 1 月 20 日公布施行了《劳动人事争议仲裁办案规则》和《劳动人事争议仲裁组织规则》。两个规则对于规范仲裁机构依法办案，推动仲裁机构和队伍建设，维护劳动人事关系和谐与社会稳定，发挥了重要作用。

新修订的《办案规则》明确了简易处理程序，目的是使事实清楚、权利义务关系明确、争议不大，或者标的额不超过本省（自治区、直辖市）上年度职工年平均工资，以及双方当事人同意简易处理的三类争议案件得到高效处理。按照新修订的《办案规则》，对适用简易处理程序的争议案件，经被申请人同意，仲裁庭可以缩短或者取消答辩期；仲裁庭可以采用电话、短信、传真、电子邮件等简便方式送达相关仲裁文书；仲裁庭可以根据案件情况，灵活确定举证期限、审理程序、文书制作等事项。

新增集体争议处理程序

新修订的《办案规则》依法细化了终局裁决范围。终局裁决是劳动人事争议仲裁法律制度设计的一大亮点，是体现仲裁制度优势的重要内容。其立法目的是，让更多涉及劳动者基本权益的简单、小额争议案件以及涉及劳动标准的争议案件终结在仲裁阶段，既减少当事人讼累，又节约司法资源。但由于多种原因，终局裁决在仲裁实践中的落实效果不是很理想，与法律制度设计的初衷还有很大差距。

在总结地方经验的基础上，新修订的《办案规则》着重增强终局裁决的可操作性，细化了终局裁决的适用范围，明确了适用终局裁决事项的标的金额为单项计算的金额，并将追索竞业限制期限内给予的经济补偿金、解除或者终止劳动合同的经济补偿、未签订书面劳动合同的第二倍工资、违法约定试用期的赔偿金、违法解除或者终止劳动合同的赔偿金等争议案件纳入了终局裁决的适用范围。

新修订的《办案规则》新增了“集体劳动人事争议处理”程序。按照中央要求，在总结地方经验基础上，新修订的《办案规则》专门规范了集体劳动人事争议处理程序，明确规定：对集体劳动人事争议，仲裁委员会应当优先立案、优先审理；仲裁庭处理集体劳动人事争议，在开庭前应当引导当事人自行协商，或者先行调解。同时，相应缩短了仲裁委员会对举证期限、开庭日期和地点等的确定和通知期限。

授权制定仲裁监督制度

与《办案规则》同步修订的《组织规则》，对加强仲裁员队伍建设提出了一些有力举措。新修订的《组织规则》主要从三方面完善了加强仲裁员队伍建设的措施。一是加强管理。明确了仲裁员的权利义务，要求仲裁委员会根据工作需要合理配备专职仲裁员和办案辅助人员，对仲裁员考核、培训等工作进行了规范。二是加强监督。授权仲裁委员会制定仲裁监督制度，对申请受理、办案程序、处理结果、仲裁工作人员行为等进行监督，明确了仲裁员违法违规的具体情形及处理措施。三是加强保障。对仲裁经费保障、仲裁场所和设施设备、仲裁工作人员统一着装等作出明确规定。同时，明确要求建立仲裁员职业保障机制，拓展仲裁员职

业发展空间。

让当事人维权更便捷

通过修订两个规则，劳动人事争议当事人维护自身合法权益也更加方便。这次新修订的两个规则，坚持以提高劳动人事争议处理质量和效率为目标，在着重围绕体现仲裁简便、灵活、高效特点完善办案程序的基础上，还为进一步方便劳动人事争议双方当事人维权作出了许多新的规定。

例如，完善案件管辖规定，让当事人维权更便捷。推行“一次性告知”制度，让当事人维权少跑路。实行快速送达方式，缩短当事人维权周期。推行“阳光仲裁”，方便社会进行监督。此外，推行流动仲裁庭，方便当事人就近维权。

03. 국가인터넷매체부, <인터넷 매체서비스 허가 관리세칙> 발표

출처 : 중앙인민방송사이트

[내용개요 : 국가인터넷매체부는 지난 5 월 22 일 <인터넷 매체 서비스 허가 관리 시행세칙>을 발표하고 지난 6 월 1 일부로 시행하였다. 세칙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명시하였다 (1) 인터넷 매체 서비스의 종류를 보다 더 세부적으로 분류함 (2) 기업법인 신청 자료 세분화 (3) 매체 플랫폼서비스 제공자가 제정 및 갖추어야 하는 제도 확립 (4) 기술안전평가 조건 확립 및 세분화 (5) 라이선스 변경, 연장, 취소 등 일환의 조건, 자료, 절차와 같은 세부 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서 라이선스 종료 메커니즘을 한 단계 개선함. 이번 세칙의 시행은 인터넷 매체 서비스 라이선스의 관리와 더 나은 서비스에 있어 큰 의미가 있다.]

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5月22日公布《互联网新闻信息服务许可管理实施细则》（以下简称“细则”），自2017年6月1日起施行。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有关负责人表示，出台细则旨在进一步细化《互联网新闻信息服务管理规定》有关条款，提高互联网新闻信息服务许可管理规范、科学化水平，促进互联网新闻信息服务健康、有序发展。

细则共十八条，其中，第一至三条，对目的依据、适用范围、服务类别作出要求；第四至八条，对互联网新闻信息服务的许可条件、申请材料、安全评估作出要求；第九至十一条，对许可受理、许可审核、许可决定作出要求；第十二至十六条，对许可变更、续办以及注销的条件、材料和程序作出要求；第十七条，对抽查、考核等监督管理要求作出要求；第十八条，对生效时间作出要求。

细则根据《互联网新闻信息服务管理规定》，重点明确以下内容：一是进一步明确了互联网新闻信息服务具体类别，细化了每类服务的概念、许可条件、申请材料等，使其更具可操作性；二是适应国有单位转企改制、企业股份制改造等情况，细化了企业法人申请材料等，以更好地维护资本安全、信息内容安全；三是明确传播平台服务提供者应当制定完善的平台账号用户管理制度、用户协议、投诉举报处理机制等，避免出现责任划分不明、监管措施落实到位等情况；四是明确了技术安全评估有关要求，细化了互联网新闻信息服务单位与境内外中外合资经营、中外合作经营和外资经营的企业进行涉及互联网新闻信息服务业务合作的安全评估

要求。五是对许可变更、续办、注销等环节的条件、材料、程序等提出明确要求，进一步完善许可退出机制。

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有关负责人强调，细则的出台对于加强互联网新闻信息服务许可管理、更好地服务行政相对人，具有重要意义。各级互联网信息办公室要切实强化属地管理责任，依法开展许可管理工作。互联网新闻信息服务提供者要严格履行主体责任，健全各项规章制度，不断强化人员队伍建设，依法提供新闻信息服务。

04. 식품 의약품 감독 관리 총국, 간소화 및 권한 이양으로 건강식품 비안 관리 추진

출처 : 국가 식품 의약품 감독 관리 총국

[내용개요 : 식품의약품 감독 관리 총국은 <건강식품 준비 업무지침서 (시범운영)>을 제정하고 건강식품 준비 소식계통을 설립하여 건강식품 등록 및 비안을 병행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 이 국면의 시행은 건강식품 원료 목록에 들어가는 건강식품들의 담당자가 정보사이트를 통해 규정과 절차에 입각해 모든 항목을 써 넣어 해당 생산품의 정보를 제출하게끔 요구할 뿐만 아니라, 담당자에게 그 정보의 진실성, 완전성, 투사 가능성 등 책임을 묻도록 한다. 요구에 부합하는 재료는 식품 의약품 감독 관리 부서에서 즉시 비안하여야 한다.]

按照《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保健食品注册与备案管理办法》关于保健食品备案管理的相关规定，为进一步落实“放管服”要求，食品药品监管总局在此前发布保健食品原料目录和保健功能目录的基础上，组织制定了《保健食品备案工作指南（试行）》，并建成了保健食品备案信息系统，开启了保健食品注册与备案“双轨制”管理的新局面。

备案管理的实行，对列入保健食品原料目录内的保健食品，要求备案人按规定和程序通过信息系统逐项填写备案人及申请备案产品相关信息，提交备案申请，并对备案材料的真实性、完整性、可溯源性负责。备案材料符合要求的，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当场备案。

下一步，食品药品监管总局将坚持依法管理、科学管理、“放管服”相结合、改革与整顿并重、社会共治原则，进一步推进保健食品审评审批和备案管理制度改革，采取“公开申请、公开论证、公开结果”的方式，从维生素矿物质原料、单一原料配方和同质化配方三个层面递进式逐步扩大原料目录范围，推进和放开产品备案管理，逐步形成备案是多数、注册审批是少数的监管新格局。

05. 관세청, 신규 입국수화물 및 특급화물 관리 감독규정 제정

출처 : CCTV사이트

[내용개요 : 관세청의 2016년 제 14호 <통과허가불가 수화물 물품 보존사항에 관한 공고>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5가지 방법으로 입국하는 수화물을 통제한다: (1)입국시 현장에서 통관세를 납부할 수 없음 (2) 출입국 물품은 라이선스 관리 대상이나, 현장에서 제공할 수 없음 (3)수화물 수량이 개인 적정량을 초과하는 출입국 물품에 대해통관수속 혹은 기타 세관신고를 하지 않음 (4) 출입국 물품의 속성 및 내용에 대해담당 주관부서의 조사, 검증 및 허가가 필요함 (5)기타 규정에 따라 잠시 통과불가인 수화물. 본 규정은 2017년 6월 1일부로 실시한다.]

根据海关总署 2016 年第 14 号《关于暂不予放行旅客行李物品暂存有关事项的公告》，《公告》明确规定 5 类入境行李不予放行，执行针对入境旅客的行李和入境快件的全面监管。规定将于 2017 年 6 月 1 日开始实施，这也意味着代购商品在入关时将面临被扣暂存的问题。

海关总署出新规全面监管入境行李和快件

自 6 月 1 日起，中国海关总署《关于暂不予放行旅客行李物品暂存有关事项的公告》正式施行，明确规定 5 类入境行李不予放行，执行针对入境旅客的行李和入境快件的全面监管。

①旅客不能当场缴纳进境物品税款的；

②进出境的物品属于许可证件管理的范围，但旅客不能当场提交的；

③进出境的物品超出自用合理数量，按规定应当办理货物报关手续或其他海关手续，其尚未办理的；

④对进出境物品的属性、内容存疑，需要由有关主管部门进行认定、鉴定、验核的；

⑤按规定暂不予以放行的其他行李物品。

个人携带物品如超“自用合理”范围将不予放行

公告规定，中国旅客进境携带在海外获取的个人自用进境物品，若不在“自用合理数量”范围内，海关将暂不予放行，并对物品进行暂存。“自用”指旅客本人自用、馈赠亲友而非为出售或出租。“合理数量”指海关根据旅客旅行目的和居留时间所确定的正常数量。

海关暂不予放行的物品，自暂存之日起 3 个月内，旅客应当办结海关手续。逾期不办的，由海关依法对物品进行处理。

业内人士解读新政常见物品有相关规定及免税额度

业内人士对新政的理解是，比如：以皮鞋为例，个人正常携带一两双皮鞋进境不会受影响，但如果一名旅客携带五六双甚至更多同一款式的皮鞋进境，就可能被认定为用于商业用途，不予放行。

根据目前的政策，目前公民海外购物除了像相机、手机等物品不免税之外，其它商品年免税额度在 20000 元，单次免税额度为 5000 元。对于入境购物的检查，以前主要是抽检。本次新政是对海外购物入境商品执行更加严格的监管措施，以打击相关非法行为。

06. 국무원, 수정된 <의료기기 감독관리 조례> 발표

출처 : 신화사

[내용개요 : 국무원은 2017년 5월 4일에 <국무원<의료기기 감독관리 조례>수정에 대한 결정>을 발표하고 시행하였다. <결정>은 총 10 조로, 주요내용은 대형 의료설비설치허가 조건 및 실시부서에 관한 내용과 국무원에 대형 의료설비 목록을 제출하고 기준을 거쳐 집행하여야 하는 규정이 포함된다. 동시에 <결정>은 허가 후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사용상황의 감독과 평가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이에 상응하는 법률책임을 추가하였다. 이 외에도 <결정>은 의료기기 임상시험 기구의 자격관리허가제도를 비안제도로 변경하였고, 의료기기 운영기업과 사용기업의 면책경우를 추가하였다.]

国务院总理李克强日前签署第 680 号国务院令，公布《国务院关于修改〈医疗器械监督管理条例〉的决定》（以下简称《决定》），自公布之日起施行。

国务院常务会议审议通过的非行政许可审批事项清理工作意见提出，将大型医用设备配置审批由非行政许可审批事项调整为行政许可事项，进一步规范和加强对大型医用设备配置、使用的管理，保障医疗质量安全，促进医疗资源合理配置。为此，国务院对《医疗器械监督管理条例》作出修改，设立大型医用设备配置行政许可。

《决定》共 10 条，主要规定了大型医用设备配置许可的法定条件、实施部门等内容，并规定大型医用设备目录由国务院部门提出、报国务院批准后执行。同时，《决定》强化了许可后的监督管理，规定由卫生计生主管部门对大型医用设备的使用状况进行监督和评估；发现违规使用以及与大型医用设备相关的过度检查、过度治疗等情形，要立即纠正、依法处理，并增设了相应的法律责任。此外，《决定》将医疗器械临床试验机构的资质管理由许可改为备案，并增加医疗器械经营企业、使用单位的免责情形。

07. 주택임대 및 매매 관련 신규제정예정 임대인 일방적으로 임대료 인상 불가

출처 : 법제사이트

[내용개요 : 주택건설부에서 <주택임대 및 매매 관리 조례>를 발표하고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주택임대와 주택매매, 부동산 중개업의 관리감독 및 법률책임 등이 있다. <공개의견수렴안>은 임대인이 주택을 임대할 경우, 임차인의 인원수와 1인당 평균 임대면적이 표준에 부합되도록 요구하고 있다. 임대료인 경우, 별도 합의 없이 임차인이 매월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고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인상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또한 <공개의견수렴안>은 개인이 임대주택을 전대할 경우 일정 규모를 초과하면 공상등기를 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위반할 시 공상행관리부에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近日从住房和城乡建设部获悉，住建部就《住房租赁和销售管理条例（征求意见稿）》公开征求意见，这是我国首次专门对住房租赁和销售进行的规范。《征求意见稿》主要内容包括住房租赁、住房销售、房地产经纪服务、监督管理及法律责任等。明确规定，出租人不得单方面提高租金，鼓励出租人与承租人签订长期住房租赁合同。

《征求意见稿》要求出租人出租住房应当符合单间租住人数和人均租住面积的标准。厨房、卫生间、阳台和地下储藏室等非居住空间，不得出租用于居住而承租人应当遵守法律、法规的规定，按照合同约定及物业管理要求合理使用租赁住房，不得擅自改动住房结构和室内设施设备，不得损害他人的合法权益。

在租金方面，《征求意见稿》提出，除另有约定外，承租人应当按月支付租金。住房租赁合同中未约定租金调整次数和幅度的，出租人不得单方面提高租金。这也就意味着，租房期间房主要求“跳涨”租金，不同意就要求搬走的行为，今后将是违规的。

在《征求意见稿》中，对名为“二房东”、实为经纪人的情形，也予以了限定。《征求意

见稿》明确，承租人可以按照住房租赁合同的约定转租住房；未约定的，承租人转租住房，应当征得出租人的书面同意。但自然人转租住房达到一定规模的，应当依法办理工商登记，否则将由工商行政管理部门依法予以处罚。

此外，《征求意见稿》对于提供住房租赁、销售信息发布服务的第三方网络交易平台，也明确了其应对信息的真实性负责。要求提供住房租赁、销售信息发布服务的第三方网络交易平台，应当对信息发布者的身份进行审核和登记。当事人通过第三方网络交易平台接受服务，其合法权益受到损害的，可以向信息发布者要求赔偿。第三方网络交易平台不能提供信息发布者真实名称、地址和有效联系方式的，可以向第三方网络交易平台提供者要求赔偿。

若第三方网络交易平台发现信息发布者存在欺诈、提供虚假材料等违法情形的，应当及时删除、屏蔽相关信息，并向有关部门报告；未采取必要措施的，依法与信息发布者承担连带责任。

08. 최고양회 개인정보형사사건처리 관련 사법해석 발표

출처 : 중앙방송사이트

[내용개요 : 5 월 1 일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은 <개인정보형사사건침해 처리에 관한 약간의 문체해석>를 발표하였고 6 월 1 일부터 실시한다. <해석>의 주요내용은 신상정보인식과 정보활동을 포함한 “개인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고 “불법적인 개인정보 제공” 및 “개인정보 불법취득” 등을 명확히 하였다. 동시에 범죄형성의 기준과 “심각한 경우”, “특별히 심각한 경우” 등으로 기준을 명확히 확정하였다. 미성년자의 경우,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처벌의 강도를 감경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随着信息化建设的推进，信息资源成为重要的生产要素和社会财富。与此同时，个人信息泄露问题严重，个人信息安全成为一个全社会高度关注的问题。为保护公民个人信息，我国《刑法修正案（七）》增设了出售、非法提供公民个人信息罪和非法获取公民个人信息罪，《刑法修正案（九）》又完善了相关规定，《最高人民法院、最高人民检察院关于办理侵犯公民个人信息刑事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又相继发布。

《解释》共十三条，主要包括十个方面的内容。解释首先明确了“公民个人信息”的范围。基于全面保护公民个人信息的现实需要，《解释》第一条规定“公民个人信息”包括身份识别信息和活动情况信息，是指以电子或者其他方式记录的能够单独或者与其他信息结合识别特定自然人身份或者反映特定自然人活动情况的各种信息，包括姓名、身份证件号码、通信通讯联系方式、住址、账号密码、财产状况、行踪轨迹等。”

根据刑法第二百五十三条之一的规定，违反国家有关规定，向他人出售或者提供公民个人信息，是侵犯公民个人信息罪的客观行为方式之一。针对司法实践的情况，《解释》第三条对非法“提供公民个人信息”的认定作了进一步明确。一是“提供”的认定。二是合法收集公民个人信息后非法提供的认定。

根据刑法第二百五十三条之一的规定，窃取或者以其他方法非法获取公民个人信息，是侵犯公民个人信息罪的客观行为方式之一。根据司法实践的情况，《解释》第四条对“非法获取公民个人信息”的认定作了进一步明确。一是规定“违反国家有关规定，通过购买、收受、交换等方式获取公民个人信息”的，属于“非法获取公民个人信息”。二是根据《网络安全法》规定的收集、使用个人信息的规则，明确违反国家有关规定，“在履行职责、提供服务过程中收集公民个人信息”的，属于“非法获取公民个人信息”。

侵犯公民个人信息罪的入罪要件为“情节严重”。根据法律精神，结合司法实践，《解释》第五条第一款设十项对“情节严重”的认定标准作了明确规定，大致涉及如下五个方面：一是信息类型和数量。二是违法所得数额。三是信息用途。四是主体身份。五是前科情况。

在此基础上，《解释》第五条第二款对侵犯公民个人信息罪的“情节特别严重”的认定标准，主要涉及如下两个方面：一是数量数额标准。根据信息类型不同，非法获取、出售或者提供公民个人信息“五百条以上”“五千条以上”“五万条以上”，或者违法所得五万元以上的，即属“情节特别严重”。二是严重后果。《解释》将“造成被害人死亡、重伤、精神失常或者被绑架等严重后果”“造成重大经济损失或者恶劣社会影响”规定为“情节特别严重”。

从实践来看，非法购买、收受公民个人信息从事广告推销等活动的情形较为普遍。为贯彻体现宽严相济刑事政策，《解释》第六条专门针对此种情形设置了入罪标准，规定为合法经营活动而非法购买、收受敏感信息以外的公民个人信息，具有下列情形之一的，应当认定为“情节严重”：（1）利用非法购买、收受的公民个人信息获利五万元以上的；（2）曾因侵犯公民个人信息受过刑事处罚或者二年内受过行政处罚，又非法购买、收受公民个人信息的；（3）其他情节严重的情形。

实践中，一些行为人建立网站、通讯群组供他人进行公民个人信息交换、流转、销售，以非法牟利。根据刑法第二百八十七条之一的规定，设立用于实施违法犯罪活动的网站、通讯群组，情节严重的，构成非法利用信息网络罪。经研究认为，供他人实施非法获取、出售或者提供公民个人信息违法犯罪活动的网站、通讯群组实际上属于“用于实施违法犯罪活动的网站、通讯群组”。当前，不少网络运营者因为履行职责或者提供服务的需要，掌握着海量公民个

人信息，这些信息一旦泄露将造成恶劣社会影响和严重危害后果。对此，《网络安全法》明确了网络信息安全的责任主体，确立了“谁收集，谁负责”的基本原则。

为充分发挥刑法的威慑和教育功能，促使侵犯公民个人信息犯罪行为积极认罪悔罪，《解释》第十条专门规定：“实施侵犯公民个人信息犯罪，不属于‘情节特别严重’，行为人系初犯，全部退赃，并确有悔罪表现的，可以认定为情节轻微，不起诉或者免于刑事处罚；确有必要判处刑罚的，应当从宽处罚。”

针对公民个人信息数量“计算难”的实际问题，《解释》第十一条专门规定了数量计算规则。具体而言：一是公民个人信息的条数计算。二是批量公民个人信息的数量认定规则。侵犯公民个人信息犯罪具有明显的牟利性，行为人实施该类犯罪主要是为了牟取非法利益。因此，有必要加大财产刑的适用力度，让行为人在经济上得不偿失，进而剥夺其再次实施此类犯罪的经济能力。

09. 국무원 <“다증합일”개혁 가속화 추진에 대한 지도의견> 발표

출처 : 신화통신

[내용개요 : 국무원에서 <“다증합일”개혁 가속화 추진에 대한 지도의견>을 발표하여 비즈니스 최적화 환경을 조성하였다. <의견>에서는 시장화개혁방향을 견지하고 자원분배의 결정적작용을 충분히 발휘할 것을 요구하였다. <의견>에 따르면, 정보수집, 공시기재, 관리검토 등 일반 경영품목과 관련된 등기사항 및 정부가 요구하는 증명사항을 영업허가증에 통합한 후 기재하여 “다증합일”을 실행하도록 요구하였다. <의견>은 상호 교류와 통계 정보공유를 결합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近日，国务院办公厅印发《关于加快推进“多证合一”改革的指导意见》（以下简称《意见》），部署推进“多证合一”改革，进一步优化营商环境，解决目前仍然存在的各类证照数量过多、“准入不准营”、简政放权措施协同配套不够等问题。

《意见》指出，要坚持市场化改革方向，充分发挥市场在配置资源中的决定性作用。按照能整合的尽量整合、能简化的尽量简化、该减掉的坚决减掉的原则，全面梳理、分类处理涉企证照事项。对于没有法律法规依据、非按法定程序设定的涉企证照事项一律取消。对于市场机制能够有效调节、企业能够自主管理的事项以及可以通过加强事中事后监管达到原设定涉企证照事项的，要逐步取消或改为备案管理。对于关系公共安全、经济安全、生态安全、生产安全、意识形态安全的涉企证照事项继续予以保留，加强准入管理，强化事中事后监管。

《意见》明确，将信息采集、记载公示、管理备查类的一般经营项目涉企证照事项，以及企业登记信息能够满足政府部门管理需要的证照事项整合到营业执照上，实行“多证合一”，使企业在办理营业执照后即能达到预定可生产经营状态，最大程度便利企业市场准入。

《意见》提出，要坚持互联互通与数据共享相结合，大力推进信息共享，打通信息孤岛。各地要在更大范围、更深层次实现部门间企业基础信息和相关信用信息共享、业务协同，实现

企业申请资料从“反复提交”向“一档管理”转变。要利用“互联网+”提高政府服务效能，加快一体化网上政务服务平台建设，最终实现各种材料“一次提交、部门流转”。

《意见》提出，各地要在“五证合一”登记制度改革工作机制及技术方案的基础上，继续全面实行“一套材料、一表登记、一窗受理”的工作模式，申请人办理企业注册登记时只需填写“一张表格”，向“一个窗口”提交“一套材料”，不断完善工作流程。登记部门直接核发加载统一社会信用代码的营业执照，相关信息在国家企业信用信息公示系统公示，并及时归集至全国信用信息共享平台。企业不再另行办理“多证合一”涉及的被整合证照事项，相关部门通过信息共享满足管理需要。已按照“五证合一”登记模式领取加载统一社会信用代码营业执照的企业，也不需要重新申请办理“多证合一”登记，由登记机关将相关登记信息通过信用信息共享平台提供给被整合证照涉及的相关部门。

《意见》强调，各地区、各部门要切实转变理念，精简事前审批，加强事中事后监管，探索市场监管新模式。全面推行“双随机、一公开”制度，按照“谁审批、谁监管，谁主管、谁监管”的原则，强化主动监管、认真履职意识，明确监管责任。通过信用管理等方式，降低市场交易风险，提高监管效能，使事中事后监管成为放宽市场准入门槛后保障市场秩序的强有力手段。

10. 심천증권거래소 독립이사 비안방법 수정, 직무자격과 독립성 등 요구 세분화

출처 : 상하이 증권 뉴스

[내용개요 : 회사 독립이사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작용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심천증권거래소는 <심천증권거래소 독립이사 비안방법>에 대한 수정을 진행하였다. 이번 수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는 독립이사직무자격 요구사항을 엄격히 하였다. 둘째는 독립이사후보자 현재까지의 직무이행내용을 보다 중시하고 공개하는 것이다. 셋째는 직무자격요구를 세분화하였다. 즉, 더욱이 직무이행의 배경에 주안점을 두고 독립이사후보자의 자격증명서 취득시간을 적절히 완화하였으며 회계전문가의 독립이사자격의 인정범위를 확대하였다.]

为进一步充分发挥独立董事在公司治理中的积极作用，完善独立董事任职资格备案工作，近日，深交所对《深圳证券交易所独立董事备案办法》（以下简称“《备案办法》”）进行了修订。相关修订细化了独立董事任职资格和独立性的相关要求，进一步夯实了独立董事忠实勤勉履职的制度基础。

据深交所有关负责人介绍，在本次修订过程中，深交所广泛征求了上市公司意见，并已将相关意见吸纳到发布稿中。整体来看，本次修订主要有以下三方面特点：

一是进一步严格了独立董事任职资格的相关要求。一方面，新修订版本对国家相关部委出台的有关规定进行细化落实；另一方面，则是加强持续监管，对独立董事在任职后出现不符合任职资格情形的，明确要求其在一个月内辞职，上市公司在两个月内完成补选工作。









二是增加对独立董事候选人过往履职情况的关注和披露要求。针对独立董事候选人过往任职期间未亲自出席董事会会议、未按规定发表独立董事意见或发表的独立意见经证实明显与事实不符、在任期届满前被上市公司提前免职等情形，《备案方法》的新修订版本要求提名人披露具体情形、仍提名该候选人的理由、是否对上市公司规范运作和公司治理产生影响及应对措施

施。

三是在细化任职资格要求、更加关注过往履职情况的背景下，适当放宽了独立董事候选人获得资格证书的时间要求，并适度扩大以会计专业人士身份担任独立董事的认定范围。

深交所相关负责人表示，独立董事制度是公司治理的重要组成部分。《备案办法》的修订进一步细化了独立董事任职资格和独立性的相关要求，特别重视独立董事候选人过往任职期间履职情况，严把入口关，进一步夯实了独立董事忠实勤勉履职的制度基础。深交所将继续做好独立董事备案相关工作，引导独立董事在提高上市公司规范运作水平、促进公司良性健康发展等方面发挥更加积极的作用。

2. 최신법률법규 (별첨)

- 01. <상장회사주주, 동사, 감사, 고급관리인원의 주식보유량 감소에 관한 규정> 
- 02. <노동인사 분쟁중재 처리 규칙> 
- 03. <노동인사 분쟁중재 조직 규칙> 
- 04. <인터넷 매체 서비스 허가 관리 시행세칙> 
- 05. <건강식품 준비 업무지침서 (시범운영)> 
- 06. <통과허가불가 수화물 물품 보존사항에 관한 공고> 
- 07. <개인정보형사사건침해 처리에 관한 약간의 문제해석> 
- 08. <“다중합일”개혁 가속화 추진에 대한 지도의견> 

3. 지역중요뉴스

01. 자유무역구 및 보세구역 수출세금환급 관리 방식

출처 : 상해자유무역구사이트

[내용개요 : 최근 몇년 간, 보세구 관리국과 세무부서는 혁신적인 수출환급 관리방식을 적극적으로 탐색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시 전체에서 전자화 수출세금환급방식 시험시행 (2)아시아 태평양운영사 세금환급신고 시스템을 창설하고 시범기업에 해관, 검역, 외화 등 일련의 편리화조치를 제공한다. 보세구 관리국은 계속하여 세무부서와 함께 보세구역 내 세금 징수방식의 혁신을 실시하여 기업의 세금편리화 수준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세금징수일체화와 무역기업의 물품상태 분류감독을 촉진하여 대외,대내무역의 일체화를 추진할 것이라 하였다.]

日前从上海自贸区保税区域获悉，近年来，保税区管理局会同税务部门对标国际，积极探索出口退税管理方式创新，并取得了显著成效。依托自贸区制度创新和海关特殊监管区域功能创新叠加优势，保税区域累计集聚国内外企业 3.7 万家，其中贸易类企业占一半左右，贡献上海 27.3%的进出口额。出口退税管理方式创新缓解了企业资金压力，并有效解决了纳税人“两头跑”“多次跑”等问题。

在全市率先试点 出口退税无纸化管理

从申报、审核、审批到退税款到账，纳税人不再需要提供纸质申报资料，这是保税区税务分局推出的出口退税无纸化管理创新。

从 2014 年到今年 3 月期间，中远海运集装箱运输有限公司国际运输业务销售额合计 1109.63 亿元，实际收到退税款 7.7 亿元。据中远海运集装箱运输有限公司相关负责人表示，采取了出口退税无纸化管理后，企业减少了报送资料量，大大缩短了退税周期，有效缓解了资金压力。

据悉，自 2015 年保税区税务分局在全市率先试点出口退税无纸化管理后，实现了全程无纸化，退税周期从原来的一般 20 个工作日，缩减至 5 到 10 个工作日，每年可节省 350 多万张纸质材料，纳税人更省时省力。

保税区税务分局有关负责人介绍，今年 4 月，保税区域共有 1273 户企业申报无纸化退税，占全部申报户数的 96.66%，当月审核通过比例达到 100%。下一步将完善出口退税无纸化管理，对出口企业进行科学分类，促进纳税人诚信建设，“不该退的税，坚决不退。”

建立亚太运营商 出口退税申报系统

旨在培育上海自贸区特色总部经济的“亚太运营商计划”，已成为政企合作的全新模式，该计划通过制度创新，为试点企业提供涉及海关、检验检疫、外汇等一系列便利化措施，促进其区域订单中心、供应链管理中心和资金结算中心在亚太区形成。

据悉，为适应两批 42 家亚太运营商计划企业“分批进货、集中销售”或“集中进货、分批销售”的业务模式，解决报关单和进货凭证“一对多”“多对一”不便于申报出口退税的问题，保税区管理局会同驻区税务部门完成亚太运营商出口退税系统开发和测试，首家试点企业（润通航运服务有限公司）已通过系统成功完成出口退税申报。

下一步将扩大试点范围，促进区内企业更好地统筹国际国内市场、离岸在岸业务，提升运作能级。

据了解，保税区域内出口退税备案企业 4284 户，2016 年底出口退税额达到 41.8 亿元。面对数量庞大的出口退税企业，为提高出口退税业务办理效率和便利化水平，驻区税务部门对 64 个出口退税事项实施标准化建设，优化附报资料等，有效解决了纳税人“两头跑”“多次跑”等问题。

保税区管理局方面表示，将继续会同税务部门在保税区域深化落实税收征管方式创新，提升企业办税便利化水平；研究推进税收征管一体化试点，推动贸易类企业参与货物状态分类监管，促进内外贸一体化发展。

02. 충칭 3대 혁신전략 실시 착안

출처 : 광명일보

[내용개요 : 1 개월 전 충칭 주식양도센터에서는 기술혁신판을 개설하였다. 기술혁신판의 창설은 지식신용 가치를 핵심으로, 고기술성 기업과 고성장성 기업에 중점을 두어 과학기술 연구, 성과전환 등에 필요한 자금을 대증으로부터 모집하는 체계이다. 이는 전통적인 자본시장에서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없었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기술혁신판은 상장회사에 전속적인 상장전시, 주식관리, 자본경영, 채권금융, 자본운용, 재무고문 등 종합적인 자본시장서비스를 제공한다.]

一家企业如果需要面向社会融资，天经地义得先让大家知道自己目前有多少家底、赚了多少钱，未来“钱景”如何。但对于重庆一些“够资格”的企业来说，这种“天经地义”现在变成了“大可不必”。重庆股份转让中心于一个月前开板的科技创新板，将帮助这些企业凭借知识价值和创新能力赢得资本市场的综合性服务。

重庆市科委主任李殿勋介绍，科创板是从制度上对传统资本市场的重大创新，该板的创设是为了构建以知识信用价值为核心，以高技术性企业和高成长性企业为重点，以科技研发、成果转化所需的资本众筹为功能的募资体系，弥补传统资本市场不能有效应对创新需求的短板。在遴选企业时，主要看重由企业的人才团队、研发投入、知识产权与创新产品等创新要素所生成的由知识价值展示出的创新能力。科创板将为挂牌企业提供专属的挂牌展示、股权托管、股权融资、债权融资、资本运作、财务顾问等综合性资本市场服务，搭建促进科技型企业成长壮大的融资平台、定价平台、培育平台和综合展示平台。

设立科创板是重庆实施创新驱动战略的具体措施之一。重庆近年来着力通过科学配套的产业政策培育创新主体、超常规构建创投体系完善创投扶持政策、立体化搭建各类创新平台，以技术供给、资本来源、创新生态三大战略性支撑协同发力，强力推进创新型城市和西部创新中心建设。

增加技术供给关键要培育创新主体，激发创新活力。重庆通过“外引”“内联”加大增量、激活存量，企业在国外设立研发中心产生的研发支出，可享受与国内同等的财政奖励补助。企业加入世界著名大学牵头的国际创新联盟和高端孵化器，可享受一定比例的费用资助。企业开发经过认证的新产品，连续两年按照新产品新增税收地方留成的 50%给予财政补助。

同时，重庆通过要素资源的市场配置激发全社会研发投入的积极性，通过设立引导基金引导社会投资。到 2016 年，重庆设立的政府引导基金参股组建子基金累计达 59 支，总规模达到 174 亿元。重庆科创板开板当日，已有 71 家高技术性、高成长性企业挂牌。预计到 2020 年年底，科创板累计挂牌企业将超过 500 家。

“解决了技术供给和资本来源后，政府实施创新驱动战略最重要的任务，就是营造局域化的创新生态系统，让技术和资本有效结合并成功对接孵化。”李殿勋说。目前全市已有市级众创空间 287 家，国家备案众创空间 33 家；科技企业孵化器 77 家，其中国家级孵化器 15 家；各类科技园区 29 个。

着眼技术、资本、创新生态三大支撑实施创新驱动战略，整体提升了重庆创新发展的能力和水平。2015 年和 2016 年，重庆的研发投入强度高速增长，区域创新能力和科技进步综合指数排名均位居全国第 8 位。2016 年，重庆高新企业同比增长 81%，高新产业产值同比增长 35%，占全市工业总产值的 28.1%，分别高于全国 10.8%的增速和 12.4%的比重。依托两江新区核心区和重庆高新区建设的国家自主创新示范区，也开始显示出高水平高起点的后发优势。

03. 성도자유무역구 기업주소신고등기제도 실시

출처 : 성도일보

[내용개요 : 성도시 공상국에서는 <성도자유무역구 의 기업주소(경영장소)신고등기제도 개혁에 대한 지도의견>을 공포하여 자유무역구 내의 신청인이 등기기관에 신고한 기업주소(경영장소)를 해당법인의 기업주소(경영장소)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리하여 신청인은 별도로 부동산 소유권증명, 임대차계약서 등 기타 주소(경영장소)사용의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된다. 해당 개혁은 성도자유무역구 내의 유한회사, 주식회사, 비기업법인, 합명회사, 개인독자회사 및 기타 지사기구에 적용된다.]

成都市工商局近日出台《关于在成都自贸区开展企业住所（经营场所）申报登记制改革试点的指导意见》（以下简称《指导意见》），在自贸区内实施登记机关将申请人申报的住所（经营场所）信息登记为企业的住所（经营场所），申请人无需提交房屋产权证明、租赁合同等其他住所（经营场所）使用证明材料的登记制度。

记者了解到，该项改革适用范围：成都自贸区内有限责任公司、股份有限公司、非公司企业法人、合伙企业、个人独资企业及其分支机构住所（经营场所）的登记管理。通过“企业申报承诺+负面清单管理+事中事后监管”等系统化举措，工商注册便利度持续发力，方便企业“安家”创业。这是成都工商为建设全面体现新发展理念的国家中心城市和助推自贸区发展的又一务实举措。

简化一表申报承诺 解除创业制约

“不用为房屋产权证明东奔西跑，直接签《经营场所申报登记承诺书》就好。”青白江区刚拿到营业执照的黄先生成为企业住所（经营场所）申报登记制改革红利的首批受益者。据悉，四川自贸试验区青白江片区已按照《指导意见》先行先试，于5月22日正式实施此项改革。与此同时，高新区、天府新区、双流区也正在积极筹备，将逐步推开。

“住所(经营场所)申报登记改革后, 申请人只需要提交《企业住所(经营场所)申报登记承诺书》, 而无需再提交房屋产权证明、租赁合同等其他住所(经营场所)使用证明材料。”市工商局注册分局局长黄维新表示, 这是成都工商部门进一步落实市党代会“放宽市场准入, 消除各种隐性壁垒”的创新举措, 是助推自贸区建设的精准施策、精准服务。

在黄维新看来, 随着市场主体数量日益增多, 通过实施企业住所(经营场所)申报登记改革, 将进一步释放企业经营场所资源, 解除住所(经营场所)对投资创业的制约, 为开办企业提供诸多便利, 为自贸区营造更加良好的营商环境。

监督-强化负面清单 13类不作登记地址

公园里不能有高档餐饮, 学校周围不能开网吧, 医院旁边不得从事娱乐经营……工商部门提醒众多想要在自贸区注册企业的申请人: 不是所有的地址都能被申报为企业住所(经营场所), 申请人应当遵守登记机关制定的负面清单管理的有关规定, 不得将负面清单内的场所申报登记为企业住所(经营场所)。

负面清单管理是深化“放管服”改革的利器。“《指导意见》详细列举了13类不能作为登记地址的情况, 各试点区域将结合城市管理实际需要作出进一步的具体规定, 使住所登记更具灵活性, 更加符合各地实际。”黄维新提醒, 申请人要承担申报登记的住所(经营场所)与实际不符、提交虚假材料或者采取其他欺诈手段隐瞒重要事实取得登记的相关法律责任。值得注意的是, 企业在申报登记的住所(经营场所)从事“先许可、后经营”的项目, 应当在取得许可证或批准文件后, 方可开展相关经营活动; 未取得许可证或批准文件, 不得开展相关经营活动。

管理-弄虚作假企业 将被列入经营异常名录

填个住所(经营场所)申报登记承诺书, 拿到营业执照后企业就可以高枕无忧随意经营了吗? 如果公司申报的住所实际处于负面清单管理范围之内, 或者是虚假地址根本就联系不到企业怎么办?

记者获悉，为确保“放管结合”和公平竞争，此次出台的《指导意见》中对建立企业住所（经营场所）监督机制进行了明确规定。登记机关对企业申报登记的住所（经营场所）进行“双公示”（依托国家企业信用信息公示系统（四川）和成都市公共信用信息系统），供社会公众、相关政府部门查询，强化了对住所（经营场所）的社会监督；对通过登记的住所（经营场所）无法取得联系的企业，或者根据投诉举报查实企业隐瞒真实情况、弄虚作假的，依法列入经营异常名录，对提交虚假材料骗取企业住所（经营场所）登记的，由登记机关依法进行查处。此外，规划、城建、国土等部门也将按照职责分工，加强对企业住所（经营场所）的事中事后监管。此次改革既强化了市场主体自我管理，又确保了部门依法监管和社会共治监督。

4. 사례분석

01. 사건소개

(1) G 사는 모 '핸드 샤워기' 외관설계의 특허권자이다. 2012 년 11 월 G 사는 L 사에서 생산, 판매 및 판매 청약한 모 시리즈 욕실 제품이 그의 '핸드 샤워기' 외관설계의 특허권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2) 재판상의 비교를 거쳐 L 사에서 생산한 제품과 G 사 관련 외관설계특허의 동일한 점을 살펴보면, 두 제품은 동종제품에 해당하고 전반적으로 볼 때 두 제품은 모두 샤워 노즐과 손잡이 부분으로 구성되었으며 피소 제품 측의 샤워 노즐에서 물을 뿜는 형태도 본 사건 관련 특허와 동일하다

(3) 두 제품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1. 피소 제품의 샤워 노즐 사방은 경사면이며, 본 사건 관련 특허의 샤워 노즐 사방은 둥근 곡면이다. 2. 피소 제품의 샤워 노즐에서 물이 나오는 면과 면판사이는 선 한가닥으로 분리되고, 본 사건 관련 특허의 샤워 노즐에서 물이 나오는 면과 면판사이는 두 가닥의 선으로 분리된다. 3. 피소 제품의 샤워 노즐에서 물이 나오는 면의 구멍 분포방식은 본 사건 관련 특허와 다른점이 있다. 4. 본 사건 관련 특허의 손잡이에는 긴 타원형의 스위치 설계가 있지만, 피소 제품에는 이러한 설계가 없다. 5. 본 사건 관련 특허의 샤워 노즐과 손잡이는 직선형태로 연결되었지만, 피소 제품의 샤워 노즐과 손잡이는 사각으로 연결되어 각도가 비교적 크다. 6. 피소 제품의 손잡이 밑단에는 궁형의 몰딩이 있지만, 본 사건 관련 특허의 밑단에는 이러한 설계가 없다. 7. 본 사건 관련 특허의 샤워 노즐 및 손잡이의 길이 비율은 피소 제품과 차이가 있으며 두 제품의 샤워 노즐과 손잡이 연결 부분의 곡면에도 차이가 있다.

02. 쟁점

절강성 고급인민법원은, 본 건의 쟁점은 피소 제품의 외관설계가 본 사건 관련 특허의 외

관설계특허권 보호범위를 침해하였는지 라고 판단하였다. <최고인민법원 특허권 침해의 분쟁 사건 심사에 관한 법률 해석>규정에 의하면, 외관설계 특허제품과 동일하거나 또는 비슷한 종류의 제품, 외관설계와 동일하거나 또는 비슷한 외관설계를 사용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피소 침해 설계가 외관설계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며, 법원은 외관설계 특허제품에 대한 일반 소비자의 지식수준 및 인식능력에 따라 외관설계가 동일하거나 또는 비슷한지에 대하여 판단한다고 하였다(제 8 조, 제 10 조). 본 사건 중, 피소 침해 제품은 본 사건의 외관설계 특허제품과 동일하며, 모두 샤워 노즐 제품이다. 본 사건의 이슈는, 일반 소비자에 대하여 피소 제품의 외관설계와 본 사건 관련 특허의 외관설계가 동일한지 또는 비슷한지 이다.

03. 심판결과

수권한 외관설계의 설계특징이 현재 존재하는 설계의 창신적인 내용과 다름을 드러내고 설계자의 현재 설계에 대하여 창조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법원은 판단하였다.

기능성디자인 특징의 인정에 대하여 볼 때, 당해 디자인에 미관이 존재하는지를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소비자가 특정기능으로 디자인 제품을 판단하는지에 의하여 결정된다.

종합하여 보면, 피소 제품의 외관설계에 본 사건 관련 외관설계의 모든 설계특징이 포함되지 않고 피소 제품의 외관설계 및 본 사건 관련 특허 외관설계가 손잡이, 샤워 노즐과 손잡이 연계 부분의 설계 등 구별되는 설계특징으로 인하여 전반적인 시각 효과로 볼 때 현저한 차이가 있다. 두 제품은 동일하지도 않고 비슷하지도 않으며 피소 침해제품의 외관설계는 본 사건 관련 특허외관설계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된 것도 아니다. L 사가 피소제품을 생산, 판매 청약, 판매하는 행위는 G 사에 대한특허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법무법인 지평